

KNSI REPORT

컨퍼런스

<제33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연평도 포격사건과 한반도 평화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17:20~19:0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원장, 동국대 교수)
- ▶ 토론: 김종대(디엔디포커스 편집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홍익표(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 주최: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 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성 (사회) :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함께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군사 및 민간 시설 파괴로 인해 연평도 전체가 민간인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해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확하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남북관계가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편집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남북관계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의 동북아 외교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편집장님 말씀해주시죠.

김종대: 작년부터 서해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나타났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우리 서북해역 일대에 포병전력을 대폭 증강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과거에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수상(水上)에서, 우리의 고속정과 북한의 경비정간에 일어났던 충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 북의 함정이 도발했을 시 대응절차를 대폭 단순화 하면서 초동대응부터 경고시간을 단축해서 제압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구축함까지 동원해서 조기에 제압하겠다는 강화된 군사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은 함정을 통한 도발 내지는 충돌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분기점은 작년 11월의 대청해전이었습니다. 그 때 짧은 경고와 함께 북한이 공격한 것의 약 80배 되는 화력을 도주하는 북한 함정을 향해 퍼붓는 대청해전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함정 대 함정이라는 과거의 대결방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 지역에서 압도적 전력의 우위를 점하는 북한이 지상포격을 대거 동원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제해권은 남한이 아무래도 우세하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제해권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군사력이 밀집한 북한을 상대로 방어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서북해역에서 약 200문 이상 증강시켜놓은 상태고,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전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장의 방식의 변화를 꾀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화된 남북관계와 맞물려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표면화되는데, 이 방식도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포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정확하게 NLL 이북에 포탄이 떨어졌고, 8월초 훈련에서는 NLL에 걸쳐서 떨어지면서 약 10발이 NLL을 월선하여 남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포사격을 하게 된 것인데 모든 포탄이 NLL을 넘어 우리 해역, 특히 연평도에 다수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점차 포사격거리를 남하시켰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전력의 비교우위의 선이 점점 남하하고 있고, 그 주기도 3~5개월이라는 주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러한 공격선이 남쪽으로 더 이동함으로써 이러한 군사정세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인천이나 영종도 쪽도 안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박순성: 당시의 한국의 군사훈련과 연평도의 포격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혹은 관련이 없는지

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이러한 교전사태가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우리 훈련이 도발의 명분이 된 것은 사실이고, 북은 이에 대해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해안의 포병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우리도 자주포를 2~3년 전부터 증강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포사격훈련을 23일 9시 40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전날부터 경고를 하면서 우리 군의 포사격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북측의 영해에 우리 군이 먼저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런 명분으로 대응차원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NLL의 적법성,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한 우리 훈련을 이 지역에서 실시하기만 하면 북은 언제든지 명분으로 삼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성: 당시 한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관련이 있는지 혹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익표: 연평도 교전은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구조적 요인이 맞물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면 먼저 남북 간의 신뢰가 손상된 것이고, 이 중요한 요소는 당국 간 대화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초기 두 차례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관리되는 등 남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최소한의 방어기제가 있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식량지원 등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국자 대화가 있었지만 이런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됐다고 보입니다.

직접적 요인은 역시 서해지역이라는 곳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취약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 교전이 있었고, 남측에서 주장하는 NLL이 존재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군사계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선은 정전협정상 의미가 없는 선입니다. 정전협정에서는 해상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전협정상 없는 선을 서로 주장함으로써 이 지역이 언제든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에서 북측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의 군사훈련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수준의, 상당히 NLL에 근접한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반복되어옴으로써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측이 우리의 훈련에 대한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배경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성: 실질적으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나 중국도 직접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이 6자회담을 준비하자는 얘기도 하고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어차피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클린턴 국무장관이 새로운 플랜을 짚는 얘기도 있었는데, 북한이 연평도에 대한 도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농축시설에 대한 보고서도 미국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점에서 북한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죠.

서보혁: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합의나 한반도의 안정과 남한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NLJ 또는 서해상 해상경계선의 문제가 남북 간 합의에 있지도 않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지만 기본합의서에 보면 남북 간 육상에서의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 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 각자 관리수역을 유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포격과 그에 대한 남한의 반응을 보았을 때, 북한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기적으로 2년 이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서방측과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체제의 안정화라든지, 경제회복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위한 자신의 대내 정치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명박, 오바마 정부가 보여주는 공세적이고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의 대북 압박정책을 명분으로 해서, 혹은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외교적 접촉을, 오히려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대내체제를 안정화하는 시간으로 역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천안함 사태 이전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도 한미 간의 대북압박정책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이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과거와 달리 남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공격적이고 압박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네바 합의 이행 이후 시기부터 일관되게 나타났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제1원칙, 서울을 지나쳐서 바로 워싱턴이 평양을 접촉하는 프레임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양국 간 깊은 컨센서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 양국 간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서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과 북한 자체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 북한도 중국과의 일정한 동맹관계를 통해 한미일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정부가 주도해온 한반도의 긴장을 동북아로 확대재생산하는 양상이 이번 연평도포격사건과 그에 대한 남한의 대응으로, 한미 간의 대응으로 그 양상이 지속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안보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적인 다자 접근이 일단 멀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두 번째,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하기 직전에 북한이 소위 초청외교라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핵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우리나라 농축개발을 포함한 핵무장 능력을 시위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구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핵무장을 해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식의 전략이 최근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를 대응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초까지는- 6자회담 재개, 남북, 북미 관계를 반전시킬 적극적이고 전격적인 외교적 조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변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발판으로 삼아서 소위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도발이 재현될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서해를 분쟁 지역화하여 국제사회에 부각 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성: 서해상에서의 교전 이후 북한의 군사적 전략 혹은 전술이 바뀌었고, 그에 대응한 남한의 군사적 전략·전술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것이 서해지역이라고 하는 정전협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결되면서 군사적 갈등의 잠재요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북한의 군사주의적 대결 양상이 당분간은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긴장 고조로 연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종대: 구조적 요인들은 이번 연평도 교전사건에 대한 직접적 설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왜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강화하느냐는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남북의 충돌은 김정은식 군사주의와 이명박식 군사주의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반복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은 'GPS 교란전술의 대가', '포병전술의 대가'라는 '군사천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최근 서북해역에서 북한의 해안의 포병전력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측에서는 함정 대 함정이라는 제한된 무기만이 아니라 지해공(地海空)을 모두 동원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군사지침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식 군사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지적이고, 제한된 무기들끼리만 교전을 하던 것을 확전의 방지정책으로 삼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남측의 이러한 전술변화에 북이 계속 반응해 왔고, 과거 함정끼리의 고전적 전투가 아니라 공세적인 두 군사주의의 충돌과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전이 국지전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장이 광역화 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확전의 양상이 존재했습니다. 초기 북측이 개머리에서 타격을 했는데 우리는 먼저 무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무도 쪽에서 다시 응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전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확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순성: 김 편집장께서는 이번 연평도 포격이 남과 북의 두 개의 군사주의의 충돌이고, 남측의 군사주의는 확전 지향적으로 재편되었고, 이번에도 사실상의 확전 양상이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다. 최소한의 억지기제 덕분에 확전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확전이 되었다가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3년 정도 서해안에서 새로운 군사 대응전략을 짰다면, 왜 이번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실하고 불충분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위기대응에서의 비체계성에 대한 의문, 곧 과연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청와대까지 전달되는가 하는 의문도 일어납니다.

홍익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후약방문식, 북측의 도발이나 교전 이후에 응징과 제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전관리, 예방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관리식으로 포인트가 모아져 있습니다. 연평교전뿐 아니라 그 이전 대북정책 패턴 자체가 그런 양상입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이 우리 사격훈련 전날과 당일 오전 두 차례 경고 전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정보 공유가 되었고, 해석이 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의례히 하는 상투적 경고문이라고 하고 더 이상 어떤 정보해석과 정책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경우 최소한 국방부에서 1차 판단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에 보고하고, 안보관련 부처의 장관급은 아니더라도 정책실장급들이 모이는 안보정책실무조정 회의를 통해 북측의 전통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북측이 실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격훈련 이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측의 정보를 해석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를 여전히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국민의 정부 초기 2차례 서해교전이 있었지만 참여정부 이후에는 전혀 교전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돌은 햇볕정책 초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대북포용정책이 정상궤도로 오르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북 감정,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민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부정책, 정부의 판단이 군사적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안전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외교안보 시스템과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순성: 남북의 군사주의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일종의 부분적 확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 편집장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우리정부는 당일 아침부터 연평도 일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전통문을 받고 북한의 포격 당일 우리군은 아침부터 연평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합참의장이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해당 부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경고했고, 이미 오전에 포사격과 거의 동시에 합참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개머리에서 타격이 있는 지 4분 후 공군 전투기가 초계비행에 돌입한 상황을 보면 비상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을 알고도 우리 군은 포격 훈련을 강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이 연평도까지 날아온다는 양상까지는 예측 못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양측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를 통한 도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해상 타격 형태에 그쳤던 것이 영토 공격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예측했는가는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재의 군사주의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주의입니다. 이번에 남과 북이 둘 다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태 첫날 청와대가 조심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내부적으로는 좋은 지침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했으나, 사태가 전개되는 와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평양에 승전축전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북한 역시 포를 발포한 후 인근 포대나 전투기 동향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 측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만 다른 전선의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교전의 성과와 관련 없이 현장에서 사태를 종결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확전의 의지는 없었지만, 전쟁을 불사하는 확전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온 것입니다. 그것이 가상의 충돌의 위협을 높여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전형적인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갔던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추후의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전면전 단계로 확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홍익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청와대의 판단이 혹시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김종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제껏 이 정부의 분위기로 볼 때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 국방비서관이나 안보특보를 통해 보고는 됐고 컨트롤은 됐을 것입니다.

홍익표: 합참이 현재의 위협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에서 관련부처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 군사주의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의 경고에 의해서 군사훈련을 포기했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하기 힘들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포기했다면 북한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비치는 것 때문에 훈련을 강행한 듯 합니다.

서보혁: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하라’는 상황판단과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군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됐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확전에 대해 말씀 해주셨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포격을 했던 지점에 대응공격을 했다면 확전의 출발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초기대응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국내적으로 보수세력의 호전적인 여론에 이용됐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외교 측면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대응의 공통점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천안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이 사건을 국제무대로 끌고 가서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동맹의 비용, 대가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계속 중국과 외교, 안보상 마찰을 하고 한반도 평화, 대북정책, 동북아 전체의 안보협력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국인 중국과 불신을 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은 현재 한미동맹관계와 보완이 아니라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천안함사태에 대한 한미합동훈련을 동해에서 할 때 일본이 참관인 자격으로 제한적으로 참

가했었습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동북아안보협력 차원에서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비전도 있고 소위 평화헌법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무기수출 3원칙, 미일 안보협력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일본의 군사적 진출, 미일안보협력 강화에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남북 간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남북이 만들어내는 군사적 충돌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전환시키려고 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협력 대화를 위한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단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한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 남북 간의 제한된, 통제 가능한 긴장을 지켜보면서 이 지역에 대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유지하는 이익, 기득권을 적절하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패권 국가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 충돌이 지역적 분쟁이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미중이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초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 역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비경쟁으로 갈 것인가, 군축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한은 물론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앞에 놓여있습니다.

박순성: 남북한 당국이 군사주의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확전까지는 원하지 않은 묘한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킨게임이 그렇듯이, 비합리적이면서도 모험주의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굴복을 항상 예상하지만 굴복하지 않을 때의 대응책은 없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 결국 피해자는 일반국민과 군 장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남북한 정부의 군사주의 혹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서해5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이번 북한 도발의 가장 큰 동기중 하나는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대북조치는 '말로는 하고 실행은 안 한다'로 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 여론에 밀려 못했고, 6월 7일이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아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 뒤 5개월 동안 '훈련을 한다 안 한다'며 번복만 했습니다. 자기가 내세운 원칙을 실행하지 않고 말따로 행동 따로이니, 북에서 쉬운 상대로 판단하기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번 교전사태에서 청와대는 완전히 고장 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확전방지에 대한 언급도 서너번 번복했는데 이것은 위기관리 제1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단호한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엉뚱한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첫째, 교전수칙인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교전수칙 따위에 적용되지 않고 후방의 지-해-공 합동 전력을 통해 언제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전수칙 때문에 단호한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교전수칙하고 단호한 대응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력과 리더십 문제인데 이것을 과거의 교전수칙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백령도에 최신 무기를 다 갖다 놓겠다, 지대지 미사일 갖다 놓겠다하는 것은 연평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해5도에 첨단무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평도는 야포전력을 보강해야지 핵심전력을 갖다 놓을 곳이 아닙니다. 지대지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증대하면 군사적 효과는 하나도 없고, 반면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보호되어야 할 전력이 집중되면 북이 타격할 주요표적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이 계속 쏟아내는 것은 청와대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중의 백미가 국방장관과 국방비서관 경질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장관과 국방비서관을 경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NLL사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사수에 관심이 있는 안보행태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순성: 서해5도를 방위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근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 연평도 백령도 일원에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증대하는 것은 군사적 효과는 하나도 없고 위험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보호해야 할 첨단 무기들이 밀집하게 되면 부대 창설도 새로 해야 하고, 지금까지도 서북5도 지역 지휘관계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없애고 통합을 해야 위기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연평도 백령도에 군시설이 밀집하게 될수록 민간인이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더 자유롭게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북해역의 안보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순성: 한국정부가 군사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당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익표: 아까 김종대 편집장이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이 살수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서 오는 안보적 취약성, 분쟁지역화되어 북한의 논리에 휘말리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도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측이 남쪽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도 대결적 측면이 존재했지만 분명히 당국 간 대화를 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나타났던 정상회담 논의, 천안함 문제가 정리가 된 후 대화 시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관계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머뭇머뭇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26일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나 협상 그 자체가 천진난만한 생각이고 대결의식이 확고하게 굳어진 그들과는 어떠한 이성과 도리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2년 수개월간에 걸쳐 얻은 뼈저린 교훈이고 결론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를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서해상 경계선이 없지만 현재 영역을 준수 하면서 합의해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평교전 이후 북측에서 조선 신보를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해지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도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공격루트가 하나는 동해축선, 또 하나는 서부전선 개성 쪽 서부축선,

또 하나가 용진반도 서해측선인데, 공교롭게도 각 지역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서해평화지대가 완성되었다라면 전쟁을 예방하는 완충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 서해지역에 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순성: 남북관계의 악화, 군사적 충돌의 발생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지불할 비용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비용보다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대미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점점 더 미국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미FTA 등에서와 같이 다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서보혁: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FTA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군사적 전략이나 무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미국의 아프간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비민주적 절차를 거쳐 외교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우려를 했었는데, G20 이후 한미FTA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민적 관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반응 중 하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남북대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실리, 체제안정, 국제사회로부터의 체제 인정 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1,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나 의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멀어지고 한반도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일 환경이나 주변 안정 등도 어려워집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유럽의 안보협력 논의과정과 이행을 사례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두 대결 진영에 있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 35개국에 참가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있었습니다. 72~75년까지 헬싱키협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안보, 경제, 인도의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합의가 75년 8월에 있었고 그 이후 이행 방안을 논의한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가 계속 되었습니다. 안보분야에만 보았을 때, 그 당시 유럽의 재래식 무기, 미-소 중심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통제 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논의가 6자회담이나 남북, 북·미 양자회담이 있으면 정식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를 비롯하여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를 말할 때 우리는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고, 북한은 포괄적 일괄 타결을 주장해 왔는데 천안함사태나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직면하면서 정부당국이나 연구자 집단에서 어떤 접근이 더 실효적일까, 어떤 접근을 기본 방법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논의도 변화된 국면에서 다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당시 CSCE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는 국가의 최고지도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정치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확보해나가면서 오판, 오인에 의한 상황악화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봤을 때 동북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안보구도 차원에서 사고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구도 속에서 강대국들간 우호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협력,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등이 북한체제를 연장시키거나 정권에 이익이 된다는 대결적 사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이거나 국제적인 이미지 등등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약컨대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한반도, 동북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커다란 두 개의 바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근본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한국사회의 프레임이 너무 완강하다는 점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시도하면 진보좌파이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대응하면 보수 우파라는 완강한 프레임 때문에 유연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대안 역시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완강한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고 정권 스스로도 그 프레임을 신봉하고, 심지어는 야당까지도 그렇습니다.

또, 보수진보논쟁과 상관없이 자위에 관한 문제임에도 개머리 포진지 제압을 확실히 했느냐 하는 문제가 공개, 검증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명박식 군사주의일 뿐만 아니라 군 관료주의의 폐해인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유연하게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문제와 달리 현장의 논리에 따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북측의 전력 증강 실태로 봤을 때 이들을 방어할 대책도 굉장히 묘연해 보입니다. 군사적 대비에는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평화지대 논의와 같이 전략적으로 큰 틀의 경영, 기본 틀로서 평화와 안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박순성: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포용정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부분이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 는 부분이었지요.

홍익표: 분단 상황에서 정부의 몫은 국가의 안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둘 다 관리해야 합니다. 군사적 수단이 직접적인 수단이라면, 비군사적 수단,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은 간접적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보니까 정책이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대북정책의 위기가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위기로까지 치닫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게다가 러시아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은 빼버렸습니다. 외교적 언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알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라고 하던가 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북핵정책만 있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가 북한을 대하는 유일한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각국 간 외교에도 북핵문제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위기가 지속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둘째, 셋째날 더 하락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 동북아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를 단순하게 응징하고 때리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경제적 협력을 해나가는데 있어 북한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보혁: 계속되는 한·미간 대북 압박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의 향상에 대응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6자회담 등 가능한 회담을 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더욱더 체찍질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다양한 옵션에 보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열린 자세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창구라고 보지는 않지만, 존재해왔고 현재 가동 가능한 채널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김종대: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북한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할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그럼 그 지난 10년 이전에는 북한은 모범생이였는가. 버릇이 좋았는가? 이게 오히려 중북, 친북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책임론이라는 것도 자가당착입니다. 또, 교전수칙 평계를 대고, 국방개혁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기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데 자기 중심논리를 못 만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이뤄 본 지난 시기의 전문가들이 이 정부를 도와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순성: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그 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악화가 누구에게, 어느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도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향후라도 평화를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은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하고, 장기적이면서도 단기적이어야 하고,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이어야 하고, 구조적이면서도 행위중심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방, 외교, 안보, 통일, 통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판단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위협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KNSI**